

# 도민 주도 사회적 문제 해결

### 전북도, 지역문제플랫폼 출범·의제실행 협약

### 환경·문화·공동체 활성화 등 13건 의제 실행

전북도는 30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민간·공공기관·대학·지자체 등 57개 기관과 함께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출범식과 의제실행 협약식을 가졌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역문제 발굴부터 해결까지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리빙랩(living lab)\* 형태로 운영되며, 특히 민·관·공 등 57개 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역량을 모아 지역문제를 발굴, 해결, 확산해 나가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행정안전부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14개 시장 군수, 대학총장 공공기관장, 민간기관 대표 등 1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출범식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양춘제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장은 공동대표로 출범 선언을 했으며, 57개 기관은 의제실행 협약서 서명을 통해 각 기관의 자원을 폭넓게 연계하고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기관별 블록쌓기 퍼포먼스와 응원타울 세레머니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올해 추진하게 될 대표 의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발표한 13건의 실행의제는 지난 한 달 동안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문제를 공모해 접수된 제안 총 93건 중 지역성, 시의성, 도민체감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 중, '전북 외국인 유학생 윈·윈 프로젝트'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과 소통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외국인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제안에 따라, 도내 대학, 공공기관 등이 협업하여 유학생 안전망 설치, 지역청년들과 소통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 구체화된 해결책을 연구하게 된다.

또한, '불편하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어르신 이동권 보장'은 노인들의 이동을 보조하는 어르신 유모차가 불편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환경 개선, 공유유모차 도입 등을 제안한 것으로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통해 어르신 유모차 동선 및 실태파악, 도로 개선, 무장애 지도제작, 어르신 유모차

디자인 등을 모색한다.

특히, '지투리목을 활용한 2차가치 창출방안'은 목직업 후 남은 폐기물을 활용하여 어르신, 취약계층 일자리와 연계해 목재 장남감을 제작하는 제안에 따라 대학교, 장애인 및 아동시설, 목공교육기관 등 협업기관을 찾아 교류제작 연구, 목공작업 교육, 시범운영 중심으로 실행을 검토하게 된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로운 전북, 도민의 행복을 위해 민·관·공 등 57개 기관이 아름다운 협업을 약속하는 지리이다"라며 "지역문제 발굴부터 실천까지 명실상부한 지역주도형 협력의 선도 모델이자 혁신적인 시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이 만족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사대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역공동체 강화를 다양한 사업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전북도는 13개 지역의제와 전국공통의제 등을 전주대지역혁신센터(실행기관)와 진행하면서 57개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연계기관과 함께 힘을 모아 현장 속 실험 진행, 정책화 모델 구체화, 협력 실천 등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30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소멸 대응기금의 효과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지방소멸 대응기금 효과적 활용방안 모색

### 도의회 정책토론회 열려... 전환성장·탄소중립 허브 활용 등 제시

전북도의회 김경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한정수 의원(교육위원회)이 30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지역소멸 대응기금의 효과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88개를 지정 후 매년 1조 원을 지원해 인구감소와 지역 간 인구 불균형 심화에 대응하도록 조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도내에서는 전주와 군산, 익산과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이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이 기금의 취지와 추

진계획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기금의 출발 자체가 정부주도의 소멸대응정책 한계에서 비롯된 만큼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추진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지역소멸을 늦추기 위해 지자체별 매력을 찾기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다.

주제 발제에 나선 전주대학교 임성진 교수는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전북의 예산 투자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세계가 탄소중립의 시대로 접어든 만큼 전북도가 새민금 재생에너지 단지 등으로 타지역에 비해 우위에 있는 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전북을 전환성장·탄소중립의 허브로 이용하자는 주장을 펼치며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김경수 기자

종합토론회는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신현영 전라북도 대도약청년과장은 지역활력을 통한 도민 삶의 질 제고 및 체류인구 확대를 기금 활용방안의 목표로 제시하였고, 조태봉 순창군 행정과장은 소멸기금의 지방비 매칭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의 광역분 기금이 시군의 매칭을 요구(6:4)하고 있어 보조율 상향등 시군 대표 인구정책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대응정책이 보조금지원보다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토론회자 모두 공통적으로 지자체별 기금활용의 자율성과 기금의 규모 확대 필요성을 요구했다. /김경수 기자

## 농민과 '생존권 보장' 연대

### 민주 신영대 의원, 서울역 대규모 집회 참석 농민 위로

### "비료값 등 폭등에 비해 쌀값은 폭락...尹정부는 방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최근 쌀값 폭락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민들과의 연대의 뜻을 밝혔다.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8월 29일 쌀 2kg의 도매가격은 46,150 원으로 1년 전 가격(58,800원)과 비교해 20% 이상 하락했다. 앞선 데 달린 격으로 불안한 글로벌 공급망과 유가 상승으로 비료, 사료, 면세유의 가격이 올라 농업 생산비는 폭등했다.

농가의 위기에도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지 않자 지난 29일 전국 농민 1만 여명은 △초과 생산된 구곡·신곡에 대한 시장격리 △중장기적 쌀 산업 안정을 위한 특대책 마련 △농기자재 가격 인상분 차액 지원사업 시행 등을 요구하는 총력대회를 열었다.

한편, 신영대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지난 25일 제108차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여당에 △쌀 10만 톤 시장격리 △쌀 자동장격리를 위한 안곡관리법 개정 협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김경수 기자

### 민주 윤준병 의원, 농어민 조세 감면 일몰연장법안 등 발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농어업인의 생업 안정과 농협·수협·축협이 농어민지원 사업 활성화 유지 목적으로 이분들의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 중인 감세·면세 특례제도가 현 정부 임기 동안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세·면세 특례규정 중 주요 항목들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등 총 8건의 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중대 이 8건의 조세감면 특례조항을 통해 농어민과 협동조합들이 감면받는 세액은 지난해에 1조8,555억원, 즉 연간 2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대단히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경수 기자

## 완주 산단 내 악취 발생 현장점검 나서

### 권요안 도의원, 예산·인력 등 관계기관에 요청

완주산업단지의 악취와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민원이 들끓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현장점검에 나섰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환경청 등 관계기관 및 주민과 함께 완주 산단 내 악취 발생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권요안 도의원, 성중기·심부건·김재천·최광호 완주군의원, 전경식 전북도 환경보전과장, 전북도·완주군 담당 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전북지방환경청, 주민대표 등 총 35명이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완주산단의 악취 및 화학물질의 위험성, 발암물질 대기 배출



량 공개 요구 등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돼 왔음에도 방치돼왔다"면서 "현장점검을 도에 요청하고 엔프로텍 등 공장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피해소스가 지속됨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방관이 예고됐던 날 새벽 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은 석연치 않다"며 "연료 출입구 CCTV 설치, 오염 자가 측정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만 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다"고 목소

리를 높였다.

그동안 완주산단 지속발전협의회, 행정기관, 시민단체 등이 악취 제거를 위해 노력했으나 산단 내 입주 업체들의 형식적인 저감 방법으로 인해 갈수록 악취 발생이 증가하는 악순환 고리가 연속되는 실정이었다.

권요안 의원은 "완주산단 인근 주민 피해의 당위성이 시급한 만큼 관계기관이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이를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야만 기업이 이윤 추구라는 명목 아래 주민의 환경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